



세계화를 위한 정보통신정책 방향



경 상 현
정보통신부장관

편집자 주) 본고는 지난 3월 23일 서울힐튼호텔에서 21세기 경영인 클럽이 주최한 조찬간담회에서 정보통신부 경상현 장관이 발표한 내용이다.

1. 새로운 질서의 형성

1) 변화하는 국제환경

냉전체제의 몰락이후 세계는 미·소 중심의 양극체제로부터 미주, 유럽, 동북아 경제권 등 다극체제로 재편되고 있으며 이념경쟁시대에서 경제실리 우선의 무한경쟁시대로 바뀌고 있다.

또한, UR협상의 타결과 더불어 지난 47년간 국제무역질서를 규율해온 GATT체제가 막을 내리고 공산품 뿐만 아니라 농산물과 서비스까지를 망라하는 보다 강력한 기능과 권한을 가진 WTO체제가 출범하게 되어 개방과 경쟁에 입각한 새로운 무역질서와 규범이 형성되고 있다.

이러한 세계질서의 커다란 흐름

을 타고 세계화와 정보화가 급속히 진전되고 있다.

생산은 물론, 유통과 판매 등 모든 부문에서 국경의 제약없이 사람, 자본, 정보가 자유로이 이동하는 세계화 현상이 가속화되면서 세계경제는 실질적 의미의 국경없는 세계로 이행하고 있고 기업들의 경제활동도 다국적화하고 있다.

또한,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정보화의 진전으로 지식과 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경제구조가 형성돼 가고 있다.

컴퓨터와 통신의 결합현상이 일반화되면서 인류의 생활방식, 생산방식과 소비태도가 근본적으로 달라지는 변혁을 맞고 있다.

2) 새로운 대응태세의 확립

정부는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부응하여 이를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활용하고자 세계화를 표방하는 일련의 강력한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세계화는 제도와 의식, 관행의 개혁을 통해 모든 분야를 세계수준으로 끌어올리고 나라와 국민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정부조직의 개편이 먼저 단행되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정보통신부는 이러한 세계화 과제 실현의 핵심부처로서 우리나라가 21세기에 세계화되고 경쟁력을 갖춘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데 많은 기여를 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 정보통신부는 정보화추진과 정보통신산업육성의 주무부처로서 시대적 요청에 걸맞는 종합적이고 일원적인 정책을 수립하여 정보가 국력의 원천이 되는 정보사회에 대비하여 정보통신기반을 정비하여 "정보화"가 원활하게 진척되도록 할 것이다.

자원절약적이고 지식집약적인 "정보통신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중점 육성하여 국가경쟁력을 제고할 계획이다.

2. 정보통신정책의 기본방향

수요 측면에서의 정보화 촉진정책과 공급 측면에서의 정보통신산업육성정책을 상호연계하여 상승효과를 극대화 할 계획이다.

공공부문의 정보화 지원과 민간

부문의 정보화 촉진을 통해 국내 정보통신산업 발전의 토양이 될 수요를 창출하고 이 국내 수요를 바탕으로 정보통신산업의 공급능력 제고와 기술의 고도화를 이룩하여 세계시장 진출의 발판을 구축할 것이다.

이러한 전략구현의 근간이 되는 사업으로 초고속정보통신기반 구축사업을 적극 활용할 것이다.

정보통신망과 H/W, S/W, DB 등이 상호연계된 시스템적인 특성을 살리고 컴퓨터·통신·방송간 상호융합화에 따른 멀티미디어의 출현에 대응하는 유기적인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시너지효과를 발휘토록 하고 정보통신분야 조직개편과 기능조정에 맞게 종래 서비스(3차) 위주 정책에서 제조업(2차)을 포함한 정책으로 발전시켜 방송분야에 대한 기술개발 및 정책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기술과 능력이 있으면 누구나 제약없이 정보통신분야에 참여할 수 있게 하여 민간의 창의와 활력을 최대한 활용할 것이다.

진입규제를 철폐하고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 지도록 정보통신 관련 법령과 제도를 구조적으로 정비·보완하고 아울러, 선진외국과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세계화를 추진할 것이다.

민간의 창의적 아이디어와 건의를 적기에 정책에 반영할 것이다.

3. '95년도 주요시책

1) 초고속정보통신기반 구축

종래 통신망 구축 위주의 계획을 H/W, S/W, DB 등 정보통신 전반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추진방향을 전환해 나가겠다.

초고속정보통신망 건설사업을 본격 착수하여 국가망은 전국 12개 주요 도시를 연결하는 초고속망을 건설하고 공중망은 대량의 통신수요지역부터 초고속망을 포설하여 관계되는 무선망, 위성망, 유선방송망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초고속정보통신기반의 이용환경을 조기에 조성하기 위하여 서울-대덕연구단지간 「선도시험망」을 구축하여 기업, 대학, 연구소 등이 초고속사업과 관련하여 개발한 기술과 제품을 자유롭게 검증·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대덕연구단지를 「정보화 시범지역」으로 선정, 400여 가구에 국산 멀티미디어 단말기를 보급, 홈쇼핑·홈뱅킹 등을 시범제공하며 정부부처를 연결하는 정부기관 「영상회의 시스템」을 구축하겠다.

또한, 2000년대 생활상을 구현하는 전시관을 건립하여 국민의 정보이용 능력과 이해를 증진해 나가겠다.

민간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초고속망에 활용될 응용서비스, 이용기술개발 등 민간의 창의와 다양성이 요구되는 분야는 "공모방식"을 통하여 모든 국민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적극 수용하고 초고속통신망 설비투자 및 연구개발분야도 민간이 제약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각종 행정규제를 과감히 철폐해 나가겠다.

초고속사업이 장기·대규모사업임을 감안하여 이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근거법을 조속히 제정하겠다.

2) 국가사회의 정보화 촉진

국가사회 각 부문별 정보화시책을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며 기관단위의 정보화보다는 서비스단위의 공동사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

공공정보화는 기 추진중인 국가기관전산망사업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IC카드, 일회방문 민원서비스 등 국민의 편의증진과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을 위한 “정부서비스”를 발굴·추진하고 공공정보의 연계활용과 안정적인 전산망 운영·지원을 위해 “국가기관전산망 운용센터(NCC)”를 설치·운영토록 하겠다.

종합물류시스템, 운송정보망 등 산업의 물류비용 절감을 위한 정보화사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 중소기업의 정보화·자동화 등 산업구조개선을 촉진하기 위한 정보통신 설비구매지원과 국책연구소의 무상기술지원도 확대할 것이다.

지방화시대에 대비하여 지역정보화사업에 강화하여 농어촌지역의 원격진료 및 교육서비스 등을 확대하고, 지역단위의 정보센터 확충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에 상응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정보화의 기반조성을 위

하여 정보의 공개 및 전자문서의 효력인정, 전산망 안전·보안 등과 관련한 제도를 정비하고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기능을 활성화하여 건전한 정보이용 문화정착을 위한 제도적 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국가사회 정보화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정보화 시책을 강구해 나가겠다.

3) 정보산업의 전략적 육성

미래 핵심산업인 정보통신기기(H/W) 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되, 멀티미디어산업을 중점적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초고속통신기반 구축사업 등과 연계한 공공수요를 집중개발하고 주문형비디오(VOD), 유선방송 등 통신·방송 융합서비스를 활성화하여 민간수요를 창출할 계획이다.

멀티미디어분야의 핵심기술 확보를 위한 국제공동연구를 활성화하며 선진국의 표준화 콘소시움에 적극적인 참여를 추진하고 방송·영상 등 뉴미디어분야의 진입제한을 대폭 완화하고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제도도 정비하겠다.

지식 집약적인 소프트웨어(S/W) 산업이 획기적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컴퓨터 세대의 참신하고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적극 발굴하여 신세대 기업군으로 육성해 나아가고 매년 80억원을 “자유공모방식”으로 대학생, 젊은 중소기업인 등에 지원할(대학과 중소기업 공동참여를 우대) 계획이다.

유통시장개방에 대비, 젊은 장

업주에 대한 창업지원을 강화하며 창작 S/W 보호제도를 보강하는 등 정품사용을 촉진하고 정보산업 연구개발 전문보세빌딩 및 S/W지원센터의 설치를 추진할 계획이며 매년 1,000억원 규모의 공공자금을 S/W분야에 지원할 것이다.

데이터베이스(DB)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정부, 공공기관 보유 정보의 공개 및 공동활용을 촉진하고 공공DB 개발·보급 및 DBMS 개발, 표준화를 지원하겠다.

4) 통신산업의 경쟁촉진

통신사업에 “경쟁원리”를 도입하여 민간의 참여를 촉진함으로써 통신사업 전반에 시장경제원리가 효율적으로 적용되도록 하겠다.

'95년도에 시외전화사업, 개인 휴대통신(PCS), 주파수공용통신, 무선데이터통신 사업자의 신규허가를 추진할 것이다.

통신사업에 대한 행정규제를 과감히 철폐하여 민간 스스로의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사업을 경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요금, 이용약관, 중요 통신설비 설치 등의 승인사항을 대폭 축소하고 해외통신사업에 대한 직접투자도 허용할 계획이다.

시장기능에 의해 통신사업자가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경쟁 확대에 부응하고 국민의 편의증진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요금제도를 개선해 나가고 통신망 상호접속, 회계분리제도를 보완하는 등 공정 경쟁여건을 조성해 나가겠다.

앞으로는 기존의 통신사업에 대하여는 공정경쟁을 강화해 나가고, 신규 정보통신사업분야는 진입제한을 철폐하여 대기업을 포함한 모든 민간의 투자 확대를 적극 유도해 나가겠다.

장기적으로는 초고속망 참여사업자와 CATV 전송망사업자의 통신사업 진출방안도 검토해 나아갈 것이다.

5) 새로운 정보매체(New Media)의 보급확대

'95년 3월 개시된 종합유선방송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여 국민의 지적능력을 증진하는 새로운 "문화정보매체"로 육성해 나가겠다. 종합유선방송 전송망의 기술 기준 등을 개선하겠다.

금년 7월로 예정된 무궁화위성의 성공적인 발사를 통하여 위성통신사업과 위성방송사업을 가능하도록 하겠다.

위성통신은 이용제도와 요금체계 등을 위성통신의 활성화가 가능한 방향으로 개선해 나갈 방침이며 위성방송은 채널배분과 사업자선정을 관계부처와 협의추진하고, 금년 12월에는 시험방송을 실시하겠다.

통신·방송의 융합과 사업자간 제휴 등 뉴미디어시장의 급격한 구조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다.

위성방송과 종합유선방송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급한 방송·영상인력 및 기술개발 지원정책 등을 적극 추진하고 관련부처와 협조하

여 영상산업에 대한 금융 등의 지원시책을 강구하고, "방송기술전문연구소" 설립을 추진할 계획이다.

21세기 핵심사회간접자본의 하나인 전파자원의 지속적 개발과 공급능력을 확충해 나가겠다.

민간의 전파이용 영역을 최대화하도록 주파수 재배치를 검토하겠으며 전파사용료 제도를 개선해 나가며, 전파배분시 시장원리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해 나아갈 것이다. 전파이용관련 규제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

6) 정보통신의 기반 강화

올해 9,000억 규모로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하여 컴퓨터, 무선통신 및 방송 등 핵심기술의 개발을 추진하겠다.

연구개발의 방향을 기업 스스로가 생존력 확보차원에서 기술개발에 주력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는 기초·기반기술 등 국민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분야를 중점 연구토록 하겠다.

세계시장 진출을 위한 선진국 우수기업, 연구소와의 전략적인 제휴를 강화할 계획이다.

독자개발이 가능한 분야는 반드시 기술자립화를 추진하고 해외시장진출 유망분야는 외국기업 등과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세계시장을 대상으로 기술개발을 추진하며 기술도입이 필요한 분야는 과감히 개방하여 무역마찰 소지를 사전에 제거해 나가겠다.

WTO체제 출범에 대비한 정보

통신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컴퓨터세대와 여성인력군의 창의력이 최대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산·학·연간의 인력교류와 공동연구를 강화하며, "정보통신전문대학원"의 신설도 검토하겠다.

국산주전산기 표준을 제정하는 등 정보산업 육성에 필요한 표준화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산업관련 정보를 적기에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정보통신종합 DB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정보통신산업 구조의 고도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한 지원시책을 강화할 것이다.

7) 정보통신의 해외진출 지원

우리의 지정학적 이점을 살려 세계정보망의 동북아 거점화 정책을 추진하여 정보유통의 세계화 및 산업진출 여건을 조성할 것이다.

아·태지역의 정보통신기반(APII) 구축을 주도하기 위하여 아·태 통신, 정보산업 장관회의를 오는 5월 서울에서 개최하고 「APII협력센터」의 설립과 서울유치를 추진하는 한편 저궤도위성통신(LEO)사업 참여, 국제해저광케이블망 구축 등 통신사업자의 해외통신망 확충과 우리나라를 세계통신망의 주요 거점(Hub)화 하는 사업을 지원하겠다.

정보통신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주요국과 정부간 상호 협력체제를 강화하고 산업진출

에 필요한 자금(EDCF) 지원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다.

WTO기본통신 다자간협상에 적극 대응하고 미국, EU 등 선진국과의 긴밀한 쌍무협의를 통하여 통상마찰을 사전해소하기 위하여 "기본통신협상대책반"을 구성·운영하고 앞으로 본격협상에 대비, 시장개방 전략을 수립하며 표준화, 형식승인, 연구개발보조문제 등 예상현안에 대한 대응방안을

수립토록 하겠다.

국제전기통신연합(ITU) 등 국제기구 활동의 전문화를 위해 정부, 산업계, 연구소의 전문가를 풀(POOL)제로 운영하는 등 국제협력의 전문대응체제도 구축하겠다.

4. 맺음말

정보통신부는 그간 여러부처에서 추진되던 정보화 및 정보통신

산업 관련정책을 합리적으로 수용할뿐 아니라 이를 종합적, 체계적으로 보완·발전시켜 나아갈 것이다.

또한, 이제부터는 정보통신분야에서는 기술력과 경영능력이 있으면 누구나 제약없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정책방향을 정함으로써 민간의 창의와 활력이 최대한 발휘되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통산부, '95 기술개발 4,600억원 지원

통상산업부는 기술획득과 기술기반 조성을 금년도 산업기술정책의 양대 목표로 설정하고 공업기반 기술개발사업 1,888억원, 공업발전기금 1,665억원, 산업기반 기술개발사업 95억원 등 각종 기술개발사업에 총 4,638억원을 지원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통산부는 우선 공업기반 기술개발사업에 경쟁기반 기술개발사업에 경쟁원리를 폭넓게 작용키로 하고 주관기관 참여대상 확대와 연구개발 사업에 복수 참여, 자유응모제 도입, 경쟁평가제 도입 등을 실시해 사업추진제를 정비, 산업법 기술개발 사업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 오는 8월까지 산업기술발전 5개년('95~'99년) 계획을 수립, 국가자원을 기술기반구조의 확충과 전략적인 기술개발 투자쪽에 집중적으로 배분해 효율성을 극대화시키는 방향으로 산업기술 정책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 여기에서 국제공동연구와 APEC 테크노마트 등을 통한 국제기술협력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국내기업의 선진기술획득 능력을 높여 나갈 방침이다.

통산부는 이와 함께 지난해 말 제정된 「공업 및 에너지기술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술기반조성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술하부구조확충 5개

년('96~2000년)계획을 금년말까지 수립할 계획이다.

또 오는 10월 경에 「한국공학원」을 설립, 국내의 산업기술 변화에 대한 추이를 분석해 산업기술 개발 전략 및 정책 등을 제시하고 산업계의 기술교류를 증진시키는 전문기관으로 육성시키는 한편 「올해의 기술인상」을 제정해 산업기술개발 분위기를 고조시켜 나가기로 했다.

또한 신기술 보육사업, 기술거래시장의 설치 등 기술확산시책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기술개발 효과를 극대화시켜 나갈 방침이다.